

박근혜는 막가파이긴 해도 막강하지는 않다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건설노조 ...



의료 민영화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들

▶ 4~5, 11 면

남아공

광원 파업 승리와
그 역사적 의의

▶ 8 면

이라크 내전

미국 힘의
한계가 드러나다

▶ 9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최신작 《자본론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2~13 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6 면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 3 면

누구의 말일까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을 통해 장차 모든 나라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전파될 것이다.”

정확히 반대로 입증된 조지 부시의 2003년 예언

“우리[클린턴 부부]는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그것(부)을 이뤘다.”

먹고 살려고 강연 뛰다 보니
1천억 원을 벌었을 뿐이라는 힐러리 클린턴

“부자집 아들인 아이가 가장 많이 이 지메를 당한다. 일본이 돈이 있다는 건 외부에서 알고 있다. 일본은 집중 공격 당하기 쉬운 나라이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힘이 길러야 한다.”

집단 괴롭힘 피하러 집단적 자위권
도입해야 한다는 일본 부총리 아소 다로

“당신들은 경찰이 범죄율을 줄이면 ANC 정부가 범죄율을 줄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경찰이 사람들을 죽이면 ANC 정부가 죽였다고 말하면 안 되는가?”

남아공 경제자유투사당 의원, 국회의장이
'정부에 의한 마리카나 학살' 발언을 제재하자

“청와대 일이라는 게 바깥에선 어떻게 볼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또 휴일도 제대로 쉼기지 못할 때가 많다.”

박근혜, 폭~ 쉬고 싶지 않은가

“KBS의 보도가 짜깁기를 통해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의 안전으로 채택했다.”

KBS의 문창극 보도를 심의하겠다는 방통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낮춰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홍원, 이리다 5년간 총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대학에 동아리를 만들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가면 될 것. 정체성이 확립 안 됐으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 조정해서 만들어 주고, 그걸 여여가지고 큰 모임을 만들어도 된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

“SNS가 활성화된 이후 우리 사회는 한번씩 왕파 놀이에 빠진다. 멀쩡한 사람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 잘못이 없어도 문 후보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중앙일보〉대기자 김진국,
동료 문창극의 낙마에 가슴이 아팠나?

“수업을 2시간만 단축시키거나 다음 날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된다. 학교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전교조 조퇴 투쟁과 달리
교총 체육대회에는 한없이 관대한
충북 진천교육지원청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김문성

사고 예방 안전 조치를 방기하고 구조도 방기해 애꿎은 목숨 수백여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제 국가는 진상 규명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윤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어떻게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지, 이 고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순위에 배치해 위협으로 내모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물론 체제가 만들어 낸 필연적 사고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1년에 2천여 명이 죽는 산업재해를 상징하는 이름이 될 수 있었고, 또 1년에 청소년 수백 명을 자살로 몰아가는 입시교육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이름도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 체제의 수혜자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해칠 진상 규명에 진심으로 협조할 리 없다. 부패에 물든 주류 정치인들은 체제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기업주나 국가관료들(관피아) 못지 않게 두려워한다.

치부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 끝에 6월 2일 출범한 국정조사특위가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입시 반상회를 열고 생중계 체포 쇼까지 벌이며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어떻게든 유병언 일가의 탐욕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권 책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임론으로 번질까 봐 어떻게든 실제적 진실 파헤치기를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만 피해가려 끝수를 부리는 게 아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등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예산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소방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징계 협박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그 수혜자·수호자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 한 노동계급에게 세월호 참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최근 〈뉴스타파〉는 배가 기울고 가라앉기 시작한 사고 시점이 해경과 검찰의 발표보다 한 시간가량 더 앞선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JTBC 〈뉴스9〉도 급변침 시점을 진주관제센터가 완전히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해경 등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원본을 이미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해경 등이 이미 선박의 복원력 상실 대처 과정에 개입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알이 밝혀야 한다.

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에 더해 관리당국이 불법 과적과 무리한 출항 등을 눈감아 준 결과로 말이다.

이 과정을 정확히 밝혀내 체제의 야만적인 실상을 폭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들이 없었다 해도 체제의 우선순위가 잉태한 국가기관들의 구조적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참사의 공범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특별법으로 수사권을 위임받은 민간기

구가 진상을 규명해 실제적 진실(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안)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서명은 시작한 지 2주 만에 1백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 된 정책들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천 번 만 번 지당하다.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사측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고(故) 진기승 동지의 죽음에 항의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기승 동지는 파업에 대한 보복 해고와 탄압으로 자결했다.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사측의 사죄와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탄압을 방조한 전주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6월 21일에는 '진기승 열사 정신 계승! 노동 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2천5백여 명이 전주 시내를 행진했다.

이날 진기승 열사의 아들이 편지를

읽자.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신성여객 회장이 우리 앞에서 ‘누가 죽으라고 했냐’며 아빠를 모욕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회장이 잘못을 뵈고, 아빠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아버지를 못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신성여객 사측은 보상금 얘기를 흘리며 유족과 노조를 이간질하려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사죄는커녕, 탄압만 일삼고 있다. 최근 사측은 차고지 농성에 대해 법원에 퇴거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규로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조합원들 집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기승 동지 죽음은 회사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일하러 나

갈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숙이고 들어가면, 사측은 더 악랄하게 민주노조를 탄압할 것”이라며 승무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유착 관계

‘진기승 열사 전북 대책위원회’는 1주일 만에 신성여객 사업권 회수를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받아 김승주 전주시장 인수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장 당선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 버스 회사들은 해경과 청해진해운 사이”라 할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은 버스 사업주들과 유착 관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대 투쟁 논의를 위해]

7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전북버스지부 소속 두 지회는 새 전주시장 취임 즈음인 7월 4일에 쟁의권을 얻는다. 만약 쟁의권을 얻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걸고서 투쟁에 나선다면, 진기승 열사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신성여객뿐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버스 사업주들이 일상적으로 조합원 해고와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 또, 전북 버스 회사들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며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주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도 있다.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부당 해고와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소은화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박근혜는 정홍원을 총리직에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던 인물을 다시 자리에 앉힌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도발적 선언인 셈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이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박근혜가 유임 결정 직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규제개혁[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다시 한 번 다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종합적 계획이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 국정 과제가 표류하는 것을 지켜 볼 수 없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모두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애통해 하는 동안 저들은 기업 이윤과 자신들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들은 무엇을 당면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가?

첫째, 공공부문 공격.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경쟁 체제

를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임금, 복지, 연금 등)을 공격하려 한다.

둘째, 임금 공격.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적어도 임금인상 폭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력 저해도 노리고 있다.

임금 공격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당 임금과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기업주들의 편을 확고히 들고 있다.

셋째, 노동 유연화 강화.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추진되고 있다.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업주들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앓는 소리를 해 왔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는 파견업무의 범위와 기간 확대 방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유연화 정책들이 담

겨 있다.

넷째, 노동조합 탄압. 박근혜 정부는 위와 같은 개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저항하는 노조를 뿌리뽑겠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등의 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런 노동조합 권리 공격의 대표적 사례다.

전 방위적

박근혜는 지방선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악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있다.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보수세력이 참 강하다는 현실을 보여 줬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해 여권이 참패를 모면했을 뿐,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패배했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 두 차례의 총리 지명자 낙마, 국정 지지도 추락이 이를 보여 준다. 이 정부가 ‘막가파’이긴 해도 막강하지는 않다.

박근혜가 노동계급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도 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못 된다. 경제 위기의 심도가 깊어 노동계급의 주요 부문들을 하나하나 고립시켜 각계

파할 만한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 공격받는 노동계급의 여러 부문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더 잘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편협한 부문주의로는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이루기가 어렵다. 투사들과 좌파들은 자기가 속한 부문에 대한 공격이 더 넓은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동료 노동자들을 설득함으로써,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정상화’와 연금 개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지후생과 연금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사기업주들은 이를 구실로 자기 종업원인 노동자들을 더 대담하게 공격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술선수범’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내 코가 석자’라는 식으로 연대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 이행을 위해 단협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때 만약 한 공기업 노조가 자기 부문이 처한 고유한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상화’ 반대를 위한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조

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기 사업장에도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은 각각 민영화와 경쟁 체제 도입, 연금 삭감,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압박, 시간제 일자리 도입, 간접고용, 파견제 확대, 단결권 침해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는 사용자들(정부와 기업주) 공격의 서로 다른 양상일 뿐이다.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기가 속한 부문의 경제적 요구를 주저없이 내놓음과 동시에,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한다면, 정부를 압박하는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저항은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력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지금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이 호소하는 7월 중순 시기 집중 파업에 기꺼이 호응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금속노조 대공장 조직이나 공공부문처럼 잘 조직된 부문들이 시기 집중 파업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노조가 아무리 막강해도 부문을 넘어 연대한 노동자들만큼 강력할 수는 없다.

14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MARXISM

맑시즘

2014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 국내외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와 진보적 저술가들의 연설

● 현안 쟁점부터 마르크스주의 기본 이론과 국제 쟁점까지 70여 개 주제

● 따분하거나 현학적이지 않은 토론 ● 청중 토론 시간 보장

www.marxism.or.kr

70여 개 주제와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가신청·문의: www.marxism.or.kr marxism@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맑시즘2014의 연사들 (연사는 계속 추가됩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종란
노무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황상기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김공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최인기
《떠나지 못 하는 사람들》 저자,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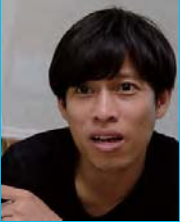
천보선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소모두
버마 이주민 인권 활동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민수
티베트계 이주민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대학교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장호중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부 등이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각각의 집회에 조합원과 지역대책위 소속 연대 단체 회원 1백 50여 명이 참가했다.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 집회에도 조합원과 연대 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6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경고 파업에 나섰다. 조합원 6백여 명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홍보 활동을 하고 보신각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6월 28일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과 민주노총 총궐기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소속 연세대의료원 노조도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에 함께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노조에 속한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진한다는 점에서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은 중요하다.

2차 파업

이처럼,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의료 민영화에 맞서, 조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대표한다.

6월 16~20일에 실시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병원 84곳의 조합원 78퍼센트가 참가해 87퍼센트가 찬성했다. 한 대학병원노조 지부장의 말대로 “이 정도면 조합원들이 파업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6월 17~23일에 실시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찬성률이 85.8퍼센트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7월 22일 필수유지 인력만 남기는 총력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병원 노동자들의 불만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공공기관 정상화), 지방의료원 민영화, 병원 노동자 임금 삭감(임금 체계 개편) 등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은 이런 정책에 호응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려고 버리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환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와 노동조건 공격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민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챈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꿈을 부러도 실제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한다는 점



6월 24일 병원 노동자 수천 명이 규제완화와 민영화, 공공성 파괴에 반대하며 도심을 행진했다.

이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데도 말이다.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진영이 지난 반년 동안 이런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1월부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2백50여 개 단체가 포함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전국 곳곳에서 서명 운동,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그 결과, 다섯 달 동안 무려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

명에 동참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서명 운동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6월 24일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전국 시도 단위 대책위와 충남 홍성군 대책위, 서울 성동구 대책위, 서울 종로지역 단체들 등 시군구 단위 대책위도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한

지금 이러한 기층의 운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과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지역대책위 활동은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효과적 방식이 될 수 있다. 기층의 지역대책위는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하면 이를 지지·지원하고 연대를 확산하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 본지 웹사이트에 지역대책위 활동 기사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개편안은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기타소득, 일용 근로소득에 모두 일

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부자들은 허술한 보험료 책정 방식을 이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 왔다. 예를 들어, 이명박은 2000~02년에 재산이 수백억 원이었는 데도 중소기업 직원으로 거짓 등록해 보험료를 1~2만 원밖에 안 냈다. 이런 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게다가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로 보면, '유리지갑'인 노동자들이 부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그러나 개편안이 이런 현실을 개선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특히 어지간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

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다.

김종대는 노동자에 견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노동자의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고 시사한다.

노동자 보험료 인상

그러나 첫째, 노동자들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은 노동자 보험료의 절반을 사측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큰 진정한 이유는 정부가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역건강보험이 도입된 1988년에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에는 전체 재정의 2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부담을 직장가입자들에게 떠넘겼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미지원한 금액이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사후정산액 8조 5천7백57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다.

게다가 개편안은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공무원·교사가 퇴직 후 받는 연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컨대, 개편안은 노동계급 내 소득 격차를 쥐꼬리만큼 줄이는 대신 계급간 양극화는 더욱 키울 것이다.

따라서 개편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한편, 정부는 6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도 일단 진료는 받을 수 있었다. 이 비용은 나중에 공단이 자체 해결하거나 체납자에게 추징해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이 환자의 보험료 납부 상태를 조회해 처음부터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조처들이 도입되면 장차 건강보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민간보험사, 병원, 자본가들은 이런 불만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건강보험 개악은 또 다른 의료 민영화다.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사측이 밀리기 시작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놀라운 용기와 투지를 발휘하며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주째 삼성 본관 앞은 염호석 열사의 분향소이자, 노동자들의 집이요, 투쟁의 거점이 됐다.

노동자들은 낮에는 한남동 이재용 사옥, 삼성 병원, 신라 호텔 등 삼성과 관련된 모든 곳을 찾아 다니며 일인 시위와 홍보전을 벌였다. 염호석 열사 소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해 해외에도 투쟁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 투쟁을 공중파에서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6월 23일 삼성전자 사장 이인용 면담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인용은 “삼성과 관련된 일로 사회적 물의와 국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

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되도록 조용히 경영 세습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삼성으로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이 지속되면서 삼성그룹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압력으로 사측은 6월 26일 염호석 열사 명예회복, 폐업센터, 노조 활동 보장, 임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내놔다. 16일에 ‘최종안’이라며 ‘더는 양보 없다’던 사측이 열흘 만에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한 것이다.

여기서 사측은, 염호석 열사와 관련해 “애도, 유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아 “원청이 보도 자료를 내”기로 했다. 또, 폐업센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폐업센터] 신설 이전에는 합의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건업체 제휴인력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을 사측이 지원하고(1억 원), 노조 전임자 9명을 두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120만 원”에 “60건을 초과하는 1건 당 경비를 제외하고 2만5천 원(편차인정)을 지급”하기로 했다. 식대 월 10만 원과 가족수당 최대 6만 원을 신설했다.

26일 노조는 확대쟁대위를 열어서 이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 안은 노조 활동 보장이나, 폐업센터 고용 승계에 대해 구체적 시한을 정한 점, 고정급(기본급)을 마련한 점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재의 낮은 임금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염호석 열사의 죽음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양산센터 내근탐장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지 않은 점, 폐업센터 고용승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단서를 달아 놓은 점을 마땅찮아하는 듯하다

또, 여전히 사측은 핵심 사항 이외에도 리스차량에 대한 지원 조건 문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장거리 수당 등 단협의 일부 사항에서 양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최종범 열사 투쟁

그래서 6월 27일 확대쟁대위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이뤘더라도 ‘단협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 전에는 파업 농성을 풀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최종범 열사 투쟁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파업을 유지해야 사측이 뒤통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임단협이

체결되더라도 “여기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힘을 키워서 내년에 더 따내야 한다” 하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말처럼 이번에 임단협이 체결되더라도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이후 투쟁하며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켜 왔다. 센터 사장이 하라는 대로 일만 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투사가 돼서 동료들과 함께 삼성과 경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번 파업과 농성을 거치며 조직은 더 단단해졌다. 이런 점이 이후 현장 투쟁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성지현

※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관련 보도는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wspaper.org)를 통해 업데이트 됩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직장폐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자

“직장폐쇄에 들어간 이유요? 한마디로 노조를 손봐 주겠다는 거지요.”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이시우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بل방송 티브로드의 협력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일제히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 조합원들은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

직장폐쇄는 법으로 엄격한 조건을 갖춘 때에만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 할 수 없도록 협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돼 왔다. 지난 2010년 에스제이엠, 만도, KEC 등에서 직장폐쇄를 앞세워 벌인 “노조

깨기”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자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고 불시에 시한부 파업을 반복하자,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이렇듯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을 작업장 밖으로 쫓아내 노동자들이 태업, 파업, 점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주지 못하게 막는다. 일단 작업장 밖으로 밀려나면, 노동자들은 이윤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 그러면 투쟁이 길어지고, 사측이 복귀를 미끼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기도 쉽다.

사측은 “노조에서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마치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양 비난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업계 1,2위를 다투며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정작

5년간 하청업체 수수료를 동결했다. 하청업체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십수 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2백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는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사측이다.

원청 압박

게다가 사측은 “파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풀 수 없다”며 노조의 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가 “임금을 대폭 포기하는 안”을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이시우 지부장의 말처럼 “(저들에게) 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이번에 노조의 기를 꺾어놓으려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공격적인 영업

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칼을 빼든 만큼 노동자들도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저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데 노조만 양보안을 제시하면 저들의 기만 살려줄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파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스제이엠 정중위 수석부지회장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의 이탈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청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임금 보장, 단단계 하도급 중단 같은 요구들은 결국 원청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승리한 것도 과감한 본사 점거로 원청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

자리를 확대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적 반감이 큰 만큼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면 원청도 압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38일 동안 파업한 끝에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 지난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켜 왔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직장폐쇄에도 굴하지 않고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런 정세를 이용해 굳건히 파업을 유지하고 단호하게 싸운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그리스

나치에게 고소당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의 법정 투쟁 승리

파노스 가르가나스

6월 12일 그리스 법원은 사회주의 신문 <노동자 연대>의 기자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카테리아 소이두, 타소스 아나스타시아데스, 그리고 나였다.

한 파시스트 변호사가 우리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해 이 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는 <노동자 연대>를 폐간시키고 싶어 했다. 그가 승소했으면 우리는 벌금으로 5만 유로(약 7천만 원)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었을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많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거의 반년 동안 지속된 운동 덕분이다.

우리가 많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재판에 중요한 투쟁 세 가지가 결부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종차별 반대 투쟁, 파시즘 반대 투쟁, 언론의 자유 보장 투쟁이다.

언론노조는 우리에게 적용된 법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언론노조는 6월 11일 공영방송사 ERT 폐쇄에 반대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다음 날 언론노조 지도자가 재판에 와서 우리를 방어했다.

이 얘기의 시작은 2010년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그리스 사회당(Pasok)은 이주민 자녀 일부에게 그리스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제약이 많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출되면서 그리스의 이민규제법에 균열이 생겼다. 우익은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벌였다.

변호사 이오니스 안드리오폴로스는 행정재판 최고 법원인 국사원까지 이 쟁점을 끌고가 다녔다. 그는 이 법안이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국사원은 이 주장에 동의했다. 이민자



그리스의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 덕분에 재판에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이 승리했다.

들이 “홍수”처럼 몰려와 국적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스 태생보다 그리스 혈통이 중요하다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때 중도우파 정당인 신민당은 사회당과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 정부의 공식 결정 사항이 되기도 전에 서둘러 폐기시켰다.

그때 우리는 안드리오폴로스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 그가 파시스트 변호사이고 파시스트 정당인 라오스당과 황금새벽당이 이끄는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안드리오폴로스는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평판이 나빠질수록 그가 파시스트와 연계돼 있다는 증거도 늘어났다.

당시 안드리오폴로스는 황금새벽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이었다.

그 의원은 지금 범죄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당할 처지에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금새벽당에 대한 사법 조사의 일환이다.

범죄 조직

우리는 재판에서 그가 황금새벽당과 연계돼 있는 것이 명백하고 우리는 진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오폴로스는 <노동자 연대>를 폐간시키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시스트에 맞서 적극 싸우기 때문이다. 특히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 운동의 성과물인, 황금새벽당에 대한 조사는 이제 정부에 실질적 위기가 되고 있다.

조사가 진척되며 황금새벽당 의원과 간부들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적 공격을 여러 차례 이끌고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시스트 캠페들은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시스트 지도자와 조직원들이 제도권의 최상층(신민당 내 거대 우파를 포함해)과 연줄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힙합 가수인 파블로스 피사스가 파시스트들에게 살해된 뒤 일어난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황금새벽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이제 사태를 되돌릴 수 없으며, 나치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더는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조사를 중단하면 큰 소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소속된 신민당의 거대 분파는 황금새벽당에 대한 조사를 멈추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알 만한 이런 사실이 3월에 밝히 드러났다. 총리 보좌관이 황금새벽당 대표직무대행을 만나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폭로된 것이다.

사마라스는 극우와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저 그는 갖은 꼼수를 부려 의회 다수파 지위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리고 되도록 표결을 피한다.

5월 말에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신민당은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뒤져 2위를 했다. 그래서 심중팔구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황금새벽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정부도 큰 곤경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8호 / 번역 최민혁

영국

긴축 반대 공동 파업을 준비하는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0일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합원이 60만 명인 공공서비스노조(UNISON)와 교원노조(NUT)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했다.

그밖에 공무원노조(PCS), 영국일반노조(GMB), 유나이티드(UNITE: 운수 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전국대학노조(UCU)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잘 조직되면 1백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될 듯하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추진한 긴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큰 타격을 입

었다.

2010년 이래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18퍼센트 줄었다. 게다가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 50만 명이 생활 임금도 벌지 못한다. 그래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렇게 적게 버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7월 10일 공공부문 공동 파업의 성공은 앞으로의 반긴축 투쟁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차승일

영국 공공부문 공동 파업은 보수 정부의 긴축정책에 효과적인 반격이 돼야 한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김문성

집권 2년차에 우파적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박근혜의 개각 시도가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까지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고 낙마한 뒤,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핵심 기반이 부패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사퇴의 총대를 맨 것이었다. 이를 물렸으니 이 정권은 세월호에 어떤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천하의 몸 쓸 정권이 된 것이다.

이번 인사 참극에서도 문제는 박근혜의 핵심 기반인 주류 엘리트 집단의 유달리 심한 부패였다.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교수로 임명하고, 심지어 군대에서 군복무는 안 하고 석박사 학위를 따라 대학원에 다닐 정도로 부패한 특권층들이었다.

이런 자들을 앞세우려 했던 박근혜식 ‘국가 개조’가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사회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들과 특히 친일 언행이 노동계급과 보통 사람들의 커다란 반감을 샀다. 7·30 재보선을 염두에 뒀야 하는 집권당 안에서 문창극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불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반대로 우파 일부는 문창극 사퇴가 ‘좌파 선동에 밀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쪽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난처함 속에서 박근혜는 지명 철회 대신 장막 뒤에서 문창극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문창극이 사퇴하고서야 박근혜는 우파를 의식해, “앞으론 부디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청문회에서 줘[야 한다]”고 무마하려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위신만 떨어뜨렸다. 인사 개편은 우파 정부답게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출발은커녕 운전수도 못 태우고 한달을 허비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신경질이 난 우파는 ‘KBS가 [문창극의] 교회 강연을 짜깁기 왜곡보도 한 것이 문제’라며 속죄양 삼기를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로 문제 삼는다. 박근혜도 지금 차기 KBS 사장에 더 우파적인 노동탄압 전문가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강점은 그가 ‘우파의’ 여왕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평범한 대중의 반감은 바로 그 점에 있다.

강점이 곧 약점인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 이탈 화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파 공세를 퍼려다가 반발이 크면 아랫것들 잘못된 양 살짝 후퇴했다가 다시 도발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철저한 친제국주의 우파였던 것이다.

반(反)전교조 뉴라이트(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로 채워진 교육 라인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선이다. 노동부장관 후보 이기권도 과거 전교조 규약개정명령에 적극 찬동했던 자다.

북풍과 야당 후보 매수에 앞장선 공작정치 전문가(국가정보원장 후보 이병기)와 공안검사(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환)를 등용한 공안 라인 등은 노동운동과 좌파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배치다.

경제부총리 후보 최경환,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2007년 박근혜의 대선 도전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집서는 ‘세’)우자는 박근혜의 우파 어젠다를 요약하는 슬로건) 공약을 만든 당사자들이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앞장서 온 강경 우익이다.

유임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새로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최양희 등 경제 라인은 모두 ‘최경환 사단’이다.

이처럼 명단만 봐도 친기업·반노동 공세를 위한 인물 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실제 비서실장 김기춘은 온갖 책임론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국가는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뿐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운 ‘국가 개조’의 실체다.



인사 참극이 박근혜의 정치 위기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인다.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등.

박근혜는 내각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우파적인 인물들을 청와대 수석들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신신 당부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목표로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수석실에서부터 중심을 딱 잡고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각종 민영화, 규제완화, 임금과 복지 삭감 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장관 후보들의 임명도 강행하려 할 것이다. KBS 보복 인사도 준비할 것이다.

박근혜가 정치적 난관 속에서도 이런 공세를 펴는 것은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성공하려면 조직 노동운동을 제압해야 한다.

둘째, 미국 힘의 약화가 친미 통치자 안에서 동요와 안보 위기감을 넣는 듯하다. 이 경우에도, 통치의 이완을 막아 보려면 역시 노동운동과 좌파를 단속해야 한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가처분 판결 때 논리를 뒤집어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은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이 유신적일 뿐, 통치 ‘체제’가 다시금 유신 체제인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파가 인사청문회나 교육감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는 건 시사적이다.

물론 계급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처가 광부 파업에 이긴 후,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런던 시의회 제도를 폐지해 버렸듯이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계급세력관계는 그때 영국과 크게 다르다. 조직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더 강하고, 박근혜의 군색한 대응을 보며 노동계급의

전반적 분위기도 싸워볼 만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KBS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전 사장 김환영을 쫓아내며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승리해 사기도 높다. 또한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삼성전자서비스와 케이블비정규직 파업, 전교조 조퇴 투쟁 등을 모아 만든 민주노총의 6월말 총궐기도 비교적 기세 좋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는 구심은 조직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공세는 일방적으로 우파를 강화시키기보다 정치적 양극화를 일으킬 것이다. 즉, 박근혜가 우파의 지지를 동원하려 할

수록 저항도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겨레> 논설위원 김의겸이 ‘투쟁을 자제해야 교육감도 살고 전교조도 산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민주노총은 이미 6월 13일에 개각 전반을 보고 “박근혜 정권은 결국 노동계와는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친기업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규정했고, 정홍원이 유임된 26일에는 “이정도 상황이면 … 인사를 포기하든 국정운영을 포기하든 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노동운동은 개별 경제 투쟁들을 모아,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 투쟁에 결합시켜야 한다.



건설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건설 노동자들의 안타까움과 아픔은 더욱 각별하다. 매년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건설 현장과 수백 명의 목숨을 끌어안고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7월 1일 '확대간부 및 열성 조합원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조합원 수만 명이 상경하는 파업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의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아래 사진)을 만나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어 봤다.

건설회사는 1년에 몇 천억씩 벌어들 이면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보다 벌금이 훨씬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해마다 건설노동자 7백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3백~4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요. 원청회사들은 그나마 벌금조차도 하청업체에 떠넘깁니다.

몇 년 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미국의 공항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현장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수도 없이 위반해서 벌금 69억 원을 냈죠. 이걸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모든 공공 공사에서는 설계가에 장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들은 정작 장비운전자(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 신호수가 없어 건설기계노동자가 장비를 후진시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오히려 '구상권'이 청구돼 배상금을 물어야 해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은 비용을 줄이려 한 건설회사에 있는데, 배상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특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윤을 위해 노동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범죄 행위에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처벌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의 건설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놓아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이윤보다 안전 건설현장은 1년에 세월호 참사를 두 번이나 겪는 위험천만한 공간이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윤 경쟁 체제 때문이다.

와 물량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목수 얼마', '철근 얼마'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고 최저가를 제시하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맡기죠. 그나마도 건설경기 부진과 불법 단계 하청 때문에 '덤핑계약'이 빈번합니다.

'덤핑 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집니다. 하청업체들은 '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박종국
노동안전국장

자 안전관리비를 최저가로 산정하고, 온종일 노동자들을 닦달해요.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출, 일몰에 따른 10시간~12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독촉'은 건설 노동자들을 매 순간 사고의 위협으로 내몰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들은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이 '빨리 하려고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노후 시설을 교체하지 않거나 값싸고 덜 안전한 공사자재를 쓰는 것도 위험 증가 요인입니다. 예컨대 건설플랜트 현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폭발, 질식, 화재 사고가 빈번해요.

값싸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판넬 같은 자재를 공사용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자재는 화재 시 불연성이 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어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얼마 전 화재사건이 일어난 고양터미널과 장성 요양원도 이런 자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질식사했

죠. 반면에 5월 말 도곡역 지하철 방화 사건은 전동차 내장재가 불연소재로 돼 있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다중 이용시설은 친환경, 불연소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기업들은 현장에 일명 '패트rolled점감'이라고 하는 감시 인원과 CCTV를 대거 늘렸습니다. '모든 사고는 노동자들이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고에 비롯된 조치이죠. 그러나 이런 천박한 인식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올해 초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를 돌아보면,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편법이 사용됐습니다. 무리한 구조변경, 함량 미달 자재, 시설대피훈련도 제대로 안 된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원인은 폭설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현장 곳곳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즉시 반영해야 참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노사협

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문제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기고한 글에 '노동의 위기가 사회안전의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산업 현장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미불산가스 유출사건처럼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노조 삼성의 노동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초과노동이나 현장의 위험요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이 안전문제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장우성

덤핑계약

채산을 무시하고 '헐값'으로 체결되는 계약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 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가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

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개인질병 정보를 수집해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겼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사업들은 모두 의료법을 어기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인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등쳐 먹지 못하도록 막아 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이런 불법 '영리' 행위를 합법화할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이 이런 짓을 하도록 허용

하면 다른 국립대병원에 이어 공공병원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다.

민간 병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컨대, 차병원그룹의 의료기관 '차움'은 하나의 간판을 단 건물 안에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스파, 체육시설, 푸드테라피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한다. 환자 입장에서 는 '진료시설'과 '부대사업'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차움은 ...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투데이)이라는 보도가 나온 까닭이다.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고은이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와 그의 최근작 『《자본론》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그것의 운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새 책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찰했다.

대중의 급진화와 저항의 분출이 《자본론》에 대한 관심 증가의 요인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은 왜 이 책을 써서 그 논의에 개입하고자 했습니까?

1990년대 이후 대중이 급진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이 일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의 지적 토대는 초기에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론》 강독과 그 강의를 엮어 낸 책[국역: 『맑스 『자본』 강의』, 창비, 2011]이 큰 관심을 끈 것을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요인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부흥하고, 《자본론》을 둘러싼 마

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입니다. 이와 관계 있는 한 가지 현상이 MEGA(마르크스와 엥겔스 저작 전집) 출판 작업의 진척입니다. 이 작업 덕분에 마르크스가 쓴 미출간 원고를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론》을 탐구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자본론》 연구는 단지 학술적 관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2007~08년 대불황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자본론》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동안 《자본론》을 다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었는데, 이번 책을 쓰면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본은 사회관계를 가리키는 개념

당신의 신간 저서의 핵심 주장 하나는 자본을 관계로, 사회관계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마르크스가 한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1840년대 직후부터 쪽 자본은 어떤 사물이나 일정량의 화폐가 아니라 사회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는 그 사회관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첫째는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노동자에게서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착취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입니

다. 《자본론》의 초고인 《그룬트리세》(『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마르크스는 “많은 자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관계는 특히 라이벌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형태를 띕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본질로 규정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관계와 그 두 가지 관계의 상호 연관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본론》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자본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트와 네그리는 자본을 모종의 사물로, 즉 그들의 책에서 “다중”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피 빨아 먹으며 기생할 뿐 별일을 하지 않는 요소로 제시합니다.

노동가치론으로 현실을 설명하기

당신은 《자본론》을 해석하면서 마르크스가 영국의 결출한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와 대결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마르크스가 리카도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무엇이고 걸러 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르크스가 리카도를 비판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와 헤겔의 관계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논의가 있고, 《자본론》이 헤겔의 《논리학》에서 많은 빛을 졌다는 얘기는 많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1850년대에 《그룬트리세》를 쓰면서 헤겔을 읽었다고 말한 사실은 유명하죠.

마르크스와 리카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경제학 저작을 보면 헤겔

이 등장하고, 그래서 마르크스와 헤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헤겔이 언급되는 부분은 무척 적습니다.

리카도에 대한 언급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의 초고 중 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고인 《1861~63년 수고》의 핵심 부분은 압도적으로 리카도 비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며 한 일을 이해하려면, 헤겔·리카도 둘다와 관련지어 마르크스를 봐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리카도에게서 받아들인 것은 노동가치론을 매우 분명히 표현한 진술입니다. 노동가치론은, 상품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필

요노동에 따라 교환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자본과 임금노동의 적대적 관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리카도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어떤 생산 형태에서든 으레 나타나는 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리카도는 자신이 밝혀낸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루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일시적인 것으로, 사회적 생산의 여러 형태의 하나

일 뿐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리카도의 이런 문제는 리카도가 택한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리카도는 노동가치론이 옳다고 단언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두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돈이 저절로 생겨나고 임금노동 착취와는 상관 없다고 여기는 금융시장에서 일어

나는 일을 리카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이런 각종 구체적 양상이 모두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에 실제로 담기지 않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방법에서 헤겔에게 큰 빛을 졌습니다. 헤겔은 겉보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원수영 기자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맑시즘2014 강연들

- 《자본론》 해독
-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 오늘날 국제 계급투쟁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

《자본론》의 방법,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은밀한 본질을 들춰내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기”가 있죠. 《자본론》에서 사용한 마르크스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기”는 마르크스가 《그룬트리세》 서문에서 쓴 말입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랬죠. 이것은 그가 헤겔에게서 빌려온 문구입니다. 이 대목에서 헤겔이 마르크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려면, 앞에서 말한 마르크스와 리카도의 관계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카도를 보면, 노동가치론과 자본주의의 여러 특징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즉, 금융시장이나 지대 같은 것들이 노동가치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여러 곳에서 리카도가 저지른 오류를 지적합니다. 리카도가 노동가치론이라는 추상적 명제를 구체적 특징들과 연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개적 단

계들”을 하나씩 이어 나가야 하는데, 리카도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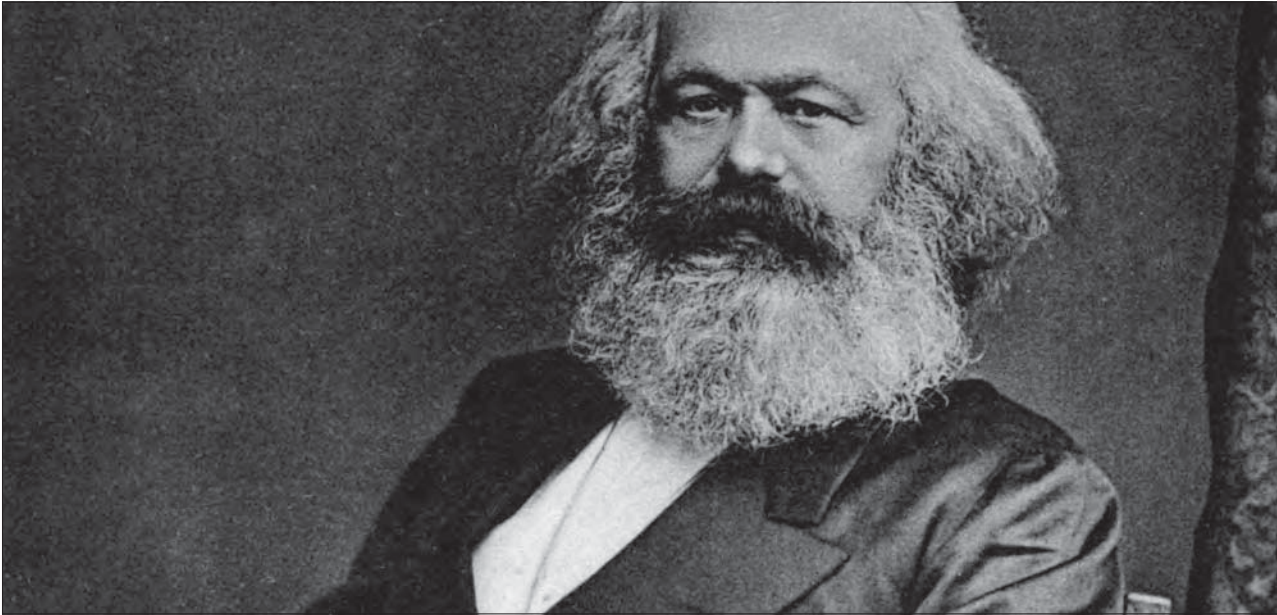
달리 말해,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구체적 양상들이 어떻게 해서 가치와 잉여를 추출하는 기초 과정에서, 즉 생산에서 일어나는 착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노동가치론과 종합적으로 연관지어 자본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겉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생산에서 일어나는 착취라는 근본적 관계가 어떻게 가려지고 감춰지는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겉모습들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본론》 제3권에서 그랬습니다.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기”라는 방

법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한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입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이 의도한 바는 자본주의의 겉모습이, 가치를 창출하고 착취하는 체제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근본적 본질과 왜 다른지 밝혀 내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적절한 지점에서 도입해 분석해 나가면, 그 특징들이 체제 전체에 어떻게 꼭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오늘날의 경제와 임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네그리와 하트,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마르크스

《자본론》에 관해 논의하면서, 순전히 이론적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임금노동의 구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논의를 간략히 설명하고 사례를 알려 주십시오.

하트와 네그리가 딱 맞는 사례입니다. 요즘에 나온 그들의 주요 저작 《연방》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자본이 본질적으로 기생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창조적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외부에 있는 자본이 이 창조적 세계로부터 가치를 뺏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지대가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리카도는 둘 다 그들과 다르게 봅니다. 생산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생산을 직접 조직하지는 않지만 노는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잉여가치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지대인 것이죠.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이 가장 분명한 사례이지만, 이런 유형의 생각이 얼마나 흔한지 보면 적잖이 놀랄 것입니다. 심지어 하비조차 ‘강탈에 의한 착취’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이런 종류의 생각에 아주 많이 양보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본론》의 핵심 사상

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직접 출판한 《자본론》 1권의 핵심 사상을 말합니다. 그 사상은 곧, 임금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고용돼 생산하며 착취당하는 생산 과정에서 가치와 잉여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던져 볼 핵심적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설명이 이 세계에 더 잘 들어맞을까요? 마르크스의 설명이 여전히 지금 세계에도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아시아로 산업 자본주의가 확장한 것입니다. 그 과정의 초기에 천연자원 장악, 토지 강탈,

농민을 땅에서 쫓아내기가 있었다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강탈에 의한 착취’이라는 하비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그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죽도록 고생하며 제조업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재생산되는 데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르크스가 근본적 특징이라 여긴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본주의는 매우 파괴적이고 낭비적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생산적인 착취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윤을 저하 경향과 금융은 어떤 관계인가?

경제 위기를 다룬 장(章)에서 당신은 마르크스가 위기에 대해 “다차원의” 개념을 가졌다고 썼습니다. 그래도 마르크스가 이윤을 저하 경향과 이것이 금융시장과 주고받는 영향을 중시했다고도 썼죠. 이에 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원래 《자본론》을 6권짜리 방대한 작업의 일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기획의 대단원은 세계 시장과 경제 위기였죠.

이처럼 마르크스는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획을 완성시키는 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포기한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체계적 분석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다. 그래도 《자본론》을 위한 원고들을 보면, 경제 위기에 관한 꽤나 복잡한 설명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론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섯 개로 분류합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당신의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윤을 저하 경향 이론입니다. 이 사상은 마르크스가 리카도에게서 물려받아 변형한 것입니다. 리카도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이 올라 이윤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마르크스는 반대로 봤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점점 더 향상돼서 이윤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 이유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그 유명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생산수단에 투자된 자본과 노동자 고용에 투자된 자본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룬트리세》부터 《자본론》 제3권까지 쭉 보면, 이 이윤을 저하 개

념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신이 상쇄 경향이라고 부른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에는 이윤율을 낮추는 힘과 이윤율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둘 다 내장돼 있습니다.

이 상쇄 경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불변자본(생산수단에 투자된 자본)의 가치 하락·파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경제 위기를 매우 중요한 상쇄 경향으로 봅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축적된 자본이 이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량으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금융시장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19세기 중반에 엄청난 금융 위기가 닥쳤고,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시에 런던에서 살고 있어서 금융 위기를 살피기에 좋은 처지였죠.

마르크스는 금융시장에서 거품 형성과 공황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축적 과정이 촉진됩니다. 거품이 형성될 때는 투자자금을 모으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 공황이 터지면 그런 자본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이윤율 수준을 회복시켜 체제가 다시 확장하는 데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 위기에 대한 매우 정교한 이론을 이루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2007~08년 사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서 이 요소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또, 그 사태가 낳은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 것인지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마르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는 구닥다리이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이후 자본주의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흔합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은 마르크스의 설명이 오늘날 세계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에 건줬던 그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매우 초기부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라고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룬트리세》에서 그는 세계시장 창출이 자본 개념 자체에 내재한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단지 빅토리아 시대 산업 자본주의를 설명했다고만 보는 것은 심각한 오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의 말 중에 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들이 지금 현실에도 들어맞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중국에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 중국이 미래의 세계 자본주의에 중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1858년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이런 흥미로운 말을 남깁니다. “저는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미국과 중국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나머지 세계의 이런 신생 자본주의가 옆에서 공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마르크스는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1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딱 맞게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 하나는 그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이해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중국이 자본 축적의 주요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마르크스가 발전시키고 있던 분석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확장이 위기, 환경 파괴,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임금노동 착취와 공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결합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었고,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중국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보면, 지난 15~20년 동안 베트남에서 발전한 거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세계 자본주의와 세계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단지 중국에 반대해서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인상 등을 위해서도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서 마르크스의 저작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4년 6월호 / 번역 차승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번에 이 족쇄를 벗어던질 길을 열어젖히려 한다. 그래서 아베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에 재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오랫동안 미·일 양국이 소망해 온 미·일동맹 강화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번 각의 결정 수정안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밀접한 타국"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래서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전쟁하려는 것이냐며 저항에 나서고 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 사례들로 나열했다. 그중에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즉,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두려는 것이다.

또,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거나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 해상무역로 기뢰 제거 활동과 중국을 겨냥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중에서 중국과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상징한 '나도 지역 불법행위 대응(그레이트존 사태)'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항목이다. MD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4월 한·미·일 국방 당국자들이 모인 '3자 안보 토의(DTT)'의 핵심 의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 방안"이었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리로 삼는 한·미·일 동맹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MD 구축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미군 기지로 향하는 북한(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격하는 게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꿈인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MD 전략은 서로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최미선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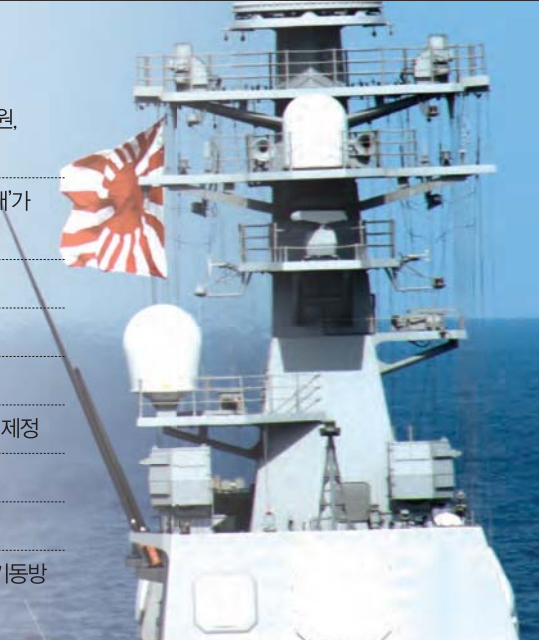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사대국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던 공명당은 최종 합의에 주저했고, 아베·자민당은 6월 국회 회기 강행 의사를 접었다.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선언한 이후 일본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애초 개헌까지 단언했던 아베는 '한정용인론'으로 발동 범위를 문구로나마 제한하거나,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일은 없다'면서 여론 달래기용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각의 결정이 되더라도 반대 여론, 항의 시위, 연일 낮아지는 지지율 등 아베 정권이 연말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즐비하다. 최미선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전에 1백30억 달러나 지원했는데도 국제 무대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정치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며 군사력에 대한 일본 지배자들의 열망은 더 커졌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사실상 정체해 왔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중국 경제는 10배 넘게 성장했다. 2010년에 일본은 중국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중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은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누려온 지위를 흔들었다.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제1교역국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력 증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1990년대 이래 일본의 보통국가화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통과. 이후 캄보디아, 모잠비크, 골란고원, 동티모르에 자위대 파견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주변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일본이 미군의 '후방지원'을 맡기로 함.
1998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TMD) 가입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돕기 위해 인도양에 이지스함 파견
2003년	유사3법(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보회의 설치법 개정안) 제정
2004년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 MD 실전 배치 시작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 '동적 방위력' 명시
2013년	11년 만에 방위비 증액,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방위계획대강에 '통합기동방위력' 명시, 수륙기동부대(해병대) 발족 추진, 헌법해석 변경 추진 등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우려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군사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 흐름은 근래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가시화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해외에서 자신과 함께 군사 작전을 펼치지 못한다는 걸 항

상 불만스러워 했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 이후 미국은 더 절실하게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막기는 일본을 말리는 처지인 것처럼 상황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과거사 문제에서는 좀 다르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 일본이 한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대국화 시도는 단지 아베의 호전성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아베가 민족주의를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협소한 관점이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대국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저성장 속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현주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 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에서 미·일은 '극동조항'을 포함시켰다.('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위협에 대해 미일 양국이 협의한다.') 1963년에는 한반도 전쟁 발발을 상징하고 미·일 공동작전 계획을 작성하기도 했다.

극동조항

무엇보다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과 1999년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국의 '후방지원'을 맡기로 규

정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이 '주변사태'로 염두에 둔 것이 한반도(그리고 대만)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일본은 '후방지원'이라는 제약도 없애고 미국과 함께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자체

가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을 겨냥한 조처들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등"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그리고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어 보면, 한반도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협의 없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현주

**MARXISM
관시즘
2014**

관시즘2014 관련 주제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

독자편지

7월 9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위영일·라두식 동지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오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삼성에 맞설 것”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동지들. 동지들의 관심으로 보내 주신 <노동자 연대>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어 많은 위안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 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오전 7시, 지난 20여 년간 삼성자본에 짓눌려 살아왔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날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밴드가 세상에

‘오픈’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밴드를 통하여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4일 만에 인원 제한 1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의 폭발적인 분노가 시작된 날로 기억합니다. 우리 동지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왜 노동조합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지회가 힘든 상황이지만 1년 전 오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의 분노를 표출한 날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삼성

자본에 투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에게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드린 듯합니다.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그 끝은 바로 동지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지들과 잡은 손 꼭 잡고 승리하는 날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삼성자본을 노동자에게 돌려 놓는 그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위영일입니다. 답답한 감옥 생활에 밖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애타던 차에 <노동자 연대>를 통한 동지들의 소식과 안부를 알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노동자 연대>를 보내 주신다면, 저에게는 한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노동자 연대> 동지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

고 제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동지들과 함께할 그날을 그리며, 동지들의 관심과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재소자 인권 침해 항의에 한발 물러선 서울구치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조의진 씨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던 서울구치소가 당사자인 조 씨와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에 한발 물러섰다.

조 씨는 올해 3월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4월 말 갑작스럽게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성동구치소에서 겪은 강제 항문검사나 일기 검열 등 인권침해에 대해 조 씨가 굽힘 없이 항의하자 부담을 느낀 교정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조 씨에 대한 권리 침해는 계속됐다. 조 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의했다. 1인당 온수 목욕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 독거방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운동 공간이 너무 비좁고 햇빛을 받는 쪽 벽면이 흰 페인트로 칠해져 눈이 부셔서 운동하기 어려운 것, 초여름인데도 관복 겹옷을 벗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낮 동안에 벽에 기대 앉거나 바닥에 눕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

조 씨의 요구에 소측은 면담 결과를 지키지 않다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다. 참다 못한 조 씨는 어느 날 운동 도중 순시하던 소장 불러 세워 운동 공간 실태를 보여주며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30분 뒤 기동순찰대(CRPT)가 조 씨의 방으

로 들이닥쳐 불시 검방을 했다.

조 씨가 항의하자 6월 12일 소측은 “점검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조 씨를 조사실에 수용했다. 조 씨는 교도관 6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깨 끌려가듯”이 끌려가던 끝에 탈진했다. 하지만 저들은 의무과에 잠시 쉬어 가게 해 달라는 조 씨의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한 채 조사실에 입실시켰다. 조사실은 징벌을 받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다.

구치소와 기동순찰대의 인권 침해와 만행에 항의하며 조 씨는 즉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항의방문

구속노동자후원회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직인 후원회’(이하 후원회) 등은 단식 6일째였던 17일에 조 씨의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19일 구속노동자후원회와 후원회는 서울구치소 측을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구치소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알렸다.

이날 항의 방문 직후 조 씨는 조사방에서 풀려나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20일에는 조 씨에 대한 징계가 훈계

수준의 경징계로 결정됐고, 23일에는 보안과장이 조 씨를 찾아와 “조사실 수용 과정에서 과도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조 씨가 요구한 사항들 가운데 운동장 벽 페인트 시공이 진행됐으며, 낮 시간에 벽에 기대거나 눕는 것이 허가됐다. 관복 겹옷 탈의를 허용하는 것과 1인당 온수 목욕 시간을 늘리는 것에 관해서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

여러 연대단체들이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 구치소 측에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에 참가했다 구속된 정진우, 김창건, 안현호 동지가 동조 단식을 한 것도 적잖은 압력이 됐을 것이다.

구치소 측이 미흡하나마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조 씨는 24일 아침에 단식을 종료했다. 그러나 재소자 인권 침해의 핵심인 기동순찰대의 만행에 관해서 서울구치소는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월 24일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노동자연대, 전쟁없는세상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재소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강병준

현대차 UPH-UP 반대 투쟁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의 모범을 보여 주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올리려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4공장 해당 부서 조합원들은 9개월 동안 UPH-UP을 반대해 사측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자 4공장 관리자들은 UPH-UP을 수용하지 않으면 4공장 생산 물량을 다른 공장으로 이관하겠다고 협박했다.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경훈 지부장은 사측이 물량이관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4공장 대의원회 대표도 물량이관 협박에 흔들려 사측과 협상을 시작했다.

단비 같은 소식

그러나 2공장 대의원회가 유례 없는 입장을 발표했다. “4공장 사측이 UPH-UP이 현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비열하게도 ‘생산 물량이 2공장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2공장을 이용해 4공장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2공장 대의원회는 물량 이관을 요구한 적도 없고 결코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공장 조합원들을 노노분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4공장 조합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UPH-UP에 반대해 활동했던 4공장 현장위원들 일부가 2공장 대의원회 대자보를 출력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카톡으로 퍼날랐다!

2공장 대의원회는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줬다.

4공장 대의원회 대표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벌어진 4공장 일부 대의원들의 도박 사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UPH-UP을 두고 사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도박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측에게 발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대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2공장 대의원회의 입장 표명도 협상 중단을 끌어낸 한 요인이었다. 4공장 대의원회 대표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2공장 대의원회의 입장 발표가 한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중단됐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대차 사측은 집요하게 4공장 UPH-UP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2공장 대의원회의 연대는 지속돼야 할 소중한 모범이다.

정동석 현대차지부 울산4공장 현장위원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철도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전출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민영화·구조조정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호 기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철도노조 전체가 함께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

다만, 활동가들의 과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노조 중앙이 투쟁 계획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고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표현상의 애매함은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 — 즉, 노조 지도부와는 독립적인 현장 투쟁 — 이 지금 현장의 투사들, 선진 조합원들의 자신감 수준을 가늠해 보건대 그들과 접점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철도노조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는 현장 투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들은 사측의 공세에 어떻게 맞설지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곧장 노조 지도부를 뛰어넘을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3월 강제전출 저지 투쟁 때와는 다른 세력관계가 노동조합 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조 지도부를 제쳐두고 독자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의 투사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듯하다. 전술은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와 투지, 자신감 수준, 노조 내 세력관계 등을 알맞게 반영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철도노조의 투사들은 지도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도부에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조직하는 것이다.

박설

함께 참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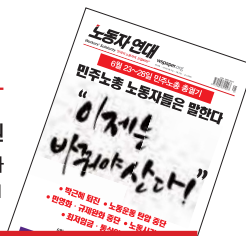
전국교사대회

일시 : 7월 12일 (토) 시간·장소 : 미정
주최 : 전교조

노조탄압 분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일시 : 7월 12일 (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주최 : 전국철도노조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김인식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 "형사 처벌",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투쟁은 노동조합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저들은 전교조 투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공안)"를 위협한다고 본다. 저들이 지키려는 '공안'은 결국 지배자들의 "안녕과 질서"이다.

사실, 조퇴 투쟁은 합법적인 행동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이 있다. 한국 국가는 교사들의 쟁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저급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의 조퇴(연가) 투쟁은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 투쟁 중 하나이다.

교사 통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비난한다. 비리, 탈세, 파렴치한 표절과 제자 논란



법외노조 탄압 항의 투쟁에 나선 전교조 6월 27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교조 조합원 조퇴 투쟁.

가로채기 등 정직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이 정부가 교사들에게 '준법'을 말하니, 가히 정신분열증이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대응은 전교조가 '만만해서가' 아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전교조 투쟁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다.

자본주의에서 교육 제도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학교와 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핵심 장치의 하나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노동은 지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 지배자들은 학교 교육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세월호 참사가 비극적으로 일깨워 준 솔로몬 '가만히 있으라'로 요약할 수 있는)를 재생산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교사 통제를 사활적으로 여긴다.

게다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집요하게 탄압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조합원이 5만 명이 넘는 대형 좌파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 정책은 물론, 학생과 다른 노동계급 부분들의 의식과 사기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10월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 거부하는 노동자 운동이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을 불신하거나 증오했고 집권당 내부의 균열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지금, 교사들의 반정부 투쟁은 정권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공안 관련 기관들이 전교조 투쟁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치 상황에 항의하는 행동에 참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업장에서 자신을 나름의 요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투쟁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실질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또, 그런 투쟁들은 전교조 투쟁을 엄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 하다.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 그러나 못하면 '네 책임이야!'

성적 지상주의는 더 극단적으로 돼 아예 성적과 가정 배경에 따라 학교를 나눠 놓는다 — 특목고·자사고·국제고 같은 특권학교와 일반학교, 일부 가난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특권학교에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특권학교는 본질적으로 부자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국가 재정 지원도 더 적고 미어터지는 과밀 학교를 다닐 공산이 크다.

보통교육(평등교육)을 짓밟고 그 자리를 대신한 엘리트주의 교육이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이런 현실을 두고 경쟁·수월 교육이라며 찬양한다. 반면, 전교조는 이런 현실에 맞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엘리트주의 교육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평범한 가정 아이들의 학습권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박태현 전교조 조합원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내정했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우익적 공격은 갈수록 거세질 듯하다. 노동자 운동은 이런 공격들에서 진보 교육감들을 옹호해야 한다.

한편,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은 교육 개혁 성취 방식과 전망을 둘러싼 견해 차이와 논쟁도 촉발시킬 것이다.

전교조가 강경 투쟁을 하면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 소중한 싹[진보 교육감의 개혁]이 법외노조를 막아보겠다는 전교조의 총력 투쟁 열기에 자칫 말라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에 부담을 주지 말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할 거라는 주장은 단견이다.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정권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굴복이 아니라 저항을 선택했다. 당시 전교조의 결단은 커다란 지지와 존경을 안팎으로부터 받았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 저항도 자극했다. 12월 철도 노동자 파업도 전교조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전교조의 이런 저항 의지는 선거에도 반영됐다. 언제나 그렇듯 전교조에 대한 태도가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문제는 진보 후보들에게 계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됐다.

방어와 비판

게다가 정권과 우익은 진보 교육감들을 공격해 아예 제거하든지(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의 경우), 아니면 순응압력을 가해 선거 공약에서 뒷걸음질치게 만들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조희연 서울 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등 교육에서 경쟁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특목고 폐지는 교사하고 자사고 폐지 문제에서도 동요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우파의 공격으로부터 진보 교육감을 '무조건' 방어해야 하지만,

'무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 진보 교육감이 동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공개적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흔히 진보 교육감들은 모순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떤 쟁점들에서는 진보적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쟁점들에서는 기회주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력'을 강조하며 진보 교육감들을 진보진영의 비판에서 자유롭게 놔 두서는 안 된다. '진보 교육감의 행보야 어떻든 우리는 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구축하면 된다'는 식의 비

정치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된다.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들에게 선거 공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활동가들은 진보 교육감 당선이 열여 놓은 기회를 활용해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과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보 교육감 당선이 촉발한 전교조 내 정치적 논쟁을 회피하지 말고 좌파 나름의 주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이 글은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신문 <발떡교사들>에 기고한 기사를 일부 수정해 보낸 것입니다.

MARXISM 맑시즘 2014

맑시즘2014 관련 주제

-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박근혜의 교육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자세한 정보는 3면을 참고하세요.